

한은 극단 처방에도 '약발' 안통하는 금융시장

“시장 신뢰 회복 하기엔 2% 부족”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 '팔자' 지속

추가 금리 인하 등 남은 카드 관심

금융당국의 고강도 금융대책에도 불구하고 27일 주가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요동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은행채 매입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카드를 내놓았지만 금융시장은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불안은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가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주가·환율 '불안 불안'=이날 코스피지수는 한은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도 장중 900선이 무너지는 등 널뛰기 장세를 펼쳤다 소폭 반등했다.

코스피는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한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했다는 소식에 966.41까지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저치(276.68)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지

속되면서 다시 1,440원대로 올라섰다.

한은 등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패닉(공황)' 상태에서만 간신히 버티어 나간 것이다.

또 금리 인하나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 우려도 환율 급등에 한 몫을 했다. 외국인이 채권을 팔고 한국을 떠나면 달러 수요가 늘어 환율이 오르게 된다.

특히 한은은 이날 금리 인하를 포함한 전방위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큰 약효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눈길은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쏠려있다.

현재 정부는 실물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 수도권 공장 건설 규제 완화 등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와 통화당국의 전방위 처방에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이 미국 등 해외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본격적인 안정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은 금리 파격 인하 등 '쇼크 요

법' 단행=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내리고 은행채·특수채 5조~10조원을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사들이기로 한 것은 한은이 발족한 이래 처음 단행한 조감수다.

이는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그동안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갈수록 추락하는 데다 실물경제도 심하게 흔들리자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향후 한국경제의 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라는 판단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한은이 향후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도 높다. 기준금리를 이날 0.75%포인트 내린 것만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실물경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시장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여러가지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면서 "그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이날 금리인하와 관련, "경제활동이 상당히 빠르게 둔화하고 있고 고용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가계나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많은 상황으로 봤다"며 "따라서 한은이 더욱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금융위기와 관련,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0년전과 상황 달라... 외환위기 없어”

위기 극복 여야 초월 국민 단결 호소

■李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발(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를 초월한 국민 모두의 단합과 단결을 호소했다.

여기에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자칫 지난 97년 외환위기 사태가 재연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금의 경제위기를 넘지 못할 경우 선진일류국가 달성은 고사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자체가 큰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 있다.

이 대통령이 총리 대독 관행을 깨고 직접 시정연설을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대통령이 국회에서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지난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첫 해 이후 5년 만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은 저에게도 빠지지 않음"이라며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국민, 특히 서민들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위기극복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을 표명하고 국회와 기업,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을 "전대미

문의 금융위기"라고 규정하면서도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10년 전과는 상황이 판이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위기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 못지 않게 국회 역할의 중요함을 역설했다. 단적으로 "비상국회"의 자세로 임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국회의 협조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정부의 노력이 탄력을 받을 수도, 일정부분 저지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국회의 대응적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기활성화와 직결돼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회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부의 국내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동의안이 국회에서 적기에 제대로 처리돼야 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제에 흔들림 없는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국회에 경제살리기, 생활공감, 미래준비, 선진화 등 4대 부문 개혁방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의 사당을 찾았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것은 지난 2월 취임식과 7월11일 국회 개원 연설에 이어 세 번째다. 오전 9시40분께 국회 본청 앞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기다리고 있던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의 영접을 받으며 미소 띤 표정으로 본청 안으로 입장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안내를 받아 의정실로 향하던 이 대통령은 김 의장을 비롯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위원회

李 대통령 26분 연설에 박수 9차례

장 등 5부요인과 각 교섭단체 대표 및 원내대표들과 티타임을 갖고 환담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자리도 마련됐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26분 가량 진행된 연설은 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국회와 국민에 대한 당부 발언 위주였던 탓에 다소 무거운 분위기였고, 대통령도 결기가 가득한 모습이었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단호한 대처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박수가 터져나오는 등 연설 동안 모두 9번의 박수가 나왔다. /연합뉴스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안 조속 처리 3당 원내대표 합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7일 정부의 은행 대외 채무 지급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도 빠른 시일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

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초청한 오찬에 참석, 현 경제의 어려운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타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김양수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오늘 오찬에서 현 시국이 어렵다는 것을 여야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지

급보증안에 대해서는 여야 정책위의장간에 합의한대로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기로 했다"며 "단 은행권의 자구노력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정치권은 계속 따져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또 민생법안중에서 여

야간에 쟁점이 없는 법안은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고,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운영제도 개선위원회가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내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위헌관결을 받은 양벌규정(兩罰規定)과 관련된 326개 법규를 개정하기로 하고, 관련법규들이 국회의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만큼 기업의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국회 규제개혁위에서 일괄처리한다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A large advertisement for 'Kwangju Information' (광주정보) featuring various services like 'Kwangju Information' (광주정보), 'Kwangju Information' (광주정보), and 'Kwangju Information' (광주정보)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